

박근혜정부의 통일 구상

Initiative for Korean Unification



www.unikorea.go.kr





CONTENTS

통일의 필요성

06 ·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의미

12 · 통일의 의미

14 · 국내적 편익

18 · 국제적 편익

박근혜정부의 통일 정책

24 · 기본 방향

26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0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과 3대 통로

36 · 체계적인 통일준비

통일의 필요성



“

지금 남북한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이 있습니다.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불신의 장벽도 쌓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 사회문화적 장벽도 높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도 있습니다. (2014. 3. 28,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공대 연설)

”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 동일한 언어와 풍습 위에 단일국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속에서 강제적으로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독립국가 회복을 위한 민족 모두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독립을 회복하였지만, 곧 이은 동서 냉전의 영향 등으로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3년 간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 남북 분단의 벽은 높아져갔습니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1970년대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 속에 남북 간에도 간헐적인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1990년 초 국제적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한반도에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2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당국간 대화가 이루어졌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남북교역 등 경제협력과 다방면에 걸친 민간 교류도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대화와 교류협력이 수십 년 동안 쌓인 상호 불신과 대립의 벽을 근본적으로 허물지 못하였습니다. 남북은 아직도 삼엄한 군사적 대치 속에서 긴장과 갈등 상태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긴장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단 침입하여 우리 해군의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포사격을 하는 등 도발을 자행했으며,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테러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DMZ 지뢰도발로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은 남북 간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그로 인한 막대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단 침입



분단으로 인한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 분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절반이 가족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측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된 6.25전쟁 국군포로와 남북자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납북되어 돌아오지 못한 우리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산가족 현황 (2015년 7월 기준, 통일부)

- 현재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총 129,698명이며 이 중 63,406명이 사망하였고 66,292명이 생존(51%)
- 이산가족 생존자 중에서 70세 이상 고령자가 54,123명으로 82%, 평균 연령 79세

국군포로 및 납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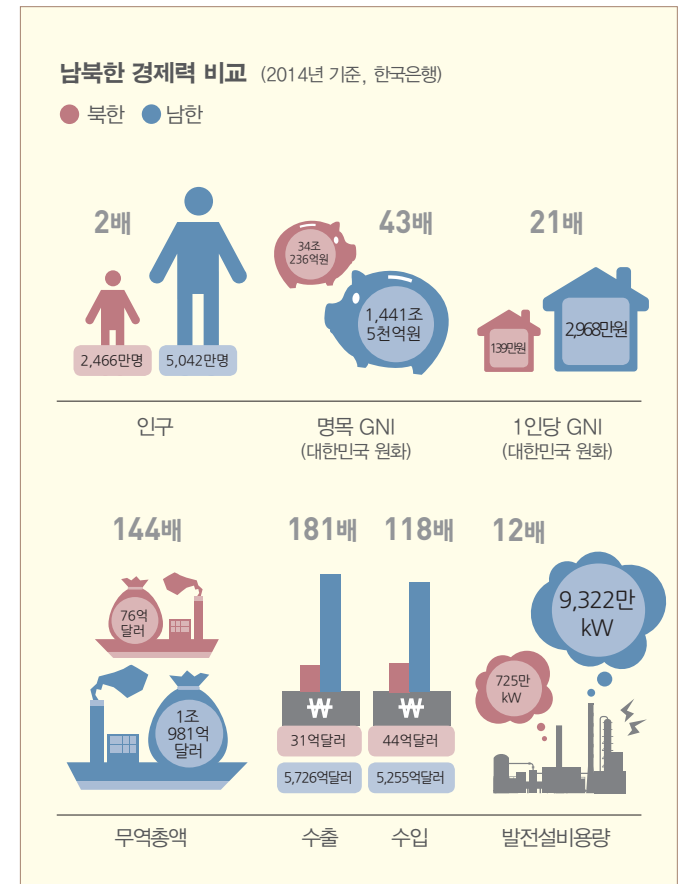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과 귀환한 국군포로의 진술을 토대로 현재 약 500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
- 6.25전쟁 중 납북자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전쟁 이후 북한에 의해 억류된 납북자는 516명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길목에 위치한 북한은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발전과 통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핵무기 개발 등으로 북한 경제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져 가고, 남북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문화도 상당 부분 달라지면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70년 동안 쌓여온 분단의 폐해를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외에 문화·예술·스포츠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위상과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국제원조 확대와 국제적 평화 유지활동에 기여하는 등 중견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자 기회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통일의 의미



“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4.1.6,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통일의 의미

통일은 지리적 측면에서는 ‘국토의 통일’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단일 국가 수립’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권의 통합’을,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1945년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은 서로 다른 두 체제와 이질화된 문화를 융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70년간 한반도를 짓누르던 전쟁의 공포도, 핵위협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통일은 한반도 전체를 평화와 희망의 터전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와 인류 전체의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바로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의 미래상입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

-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
 - 한반도 전역에서 인권과 자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평화와 번영이 확산
-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들어 가는 한반도**
 - 동북아시아의 갈등 극복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 **인류발전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한반도**
 -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개발협력을 선도하며 세계평화와 안보 증진에 기여

국내적 편익

민족적 측면

우리 민족은 수많은 국난을 겪으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단일 국가를 유지·발전시켜온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감안할 때 지난 70년간 분단으로 인한 대결과 갈등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고, 남북한 주민이 함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의 가치를 향유하는 단일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안보적 측면

통일은 한반도 안보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실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무력충돌이 여러 차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궁극적인 길은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경제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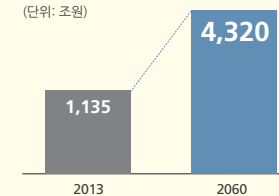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내수시장은 8천만명 규모로 커지고, 경제활동 범위는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결합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교통과 물류의 축이 연결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를 구심점으로 무역과 물류·에너지·관광 산업 등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 이후 45년간 경제적 편익규모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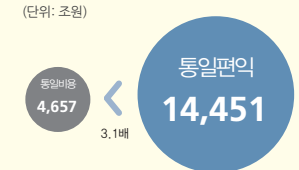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 통일한국의 GDP 규모를 2013년 1,135조원(세계 12위)에서 2060년 4,320조원(세계 10위)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
-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통일비용 추산액은 4,657조원이지만 순편익은 1경 4,451조원으로 통일편익은 통일비용의 3.1배
- 북한지역 개발에 따라 남한지역에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는 3,650조원(연평균 81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683조원(연평균 37.4조원), 취업유발효과는 2,953만여명(연평균 65.6만여명)

통일한국의 GDP
(단위: 조원)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
(단위: 조원)



통일재원 마련

- 독일은 통일 후 필요한 재원을 주로 공공부문에서 조달하였으나, 한반도 통일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투자자금, 국제기구나 해외투자 등을 활용한다면 초기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
-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면서 시장이 느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투자매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원마련 대책이며, 주변국·국제금융기관 등에서 한반도 통일에 투자할 경우 민간재원의 효과적 동원도 가능

통일대박 관련 영국 *Economist* 보도

(2015. 2. 27, 인터넷판)

- *Economist*지는 '한국의 기회(Korea Opportunities)'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함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은 통일이후 현재의 2배 규모의 영유아 인구를 확보하고 군대통합 등을 통해 총 1,700만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증가되는 등 인구학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
- 북한에 분포하는 희토류도 큰 혜택이 될 것이며, 북한의 광물 자원은 약 10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고 언급

일부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비용의 규모는 통일 시점의 경제상황이나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여 나가고 통일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나간다면, 통일에 드는 비용은 줄이고 통일비용을 뛰어넘는 통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

통일은 적대적, 대결적 냉전문화를 청산하고 신뢰와 관용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분단은 남북간 이질화를 심화시키고, 우리의 정치문화, 시민사회 속에도 은연중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통일은 우리 사회의 갈등해소와 민주주의 문화를 성숙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남북 간에 단절되었던 공동체 의식과 생활양식들이 하나로 융합됨으로써 통일은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 편익

지금 동아시아에는 협력과 갈등의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한반도는 그런 요인들이 가장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곳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전체의 안보·경제 환경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보적 측면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의 핵심고리였듯이 통일한국은 동북아 통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비핵평화국가로서 인적·물적 교류 및 상호 이해와 신뢰구축의 거점이 됨으로써 동북아에서 다자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방지하고, 군비축소와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통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

통일된 한반도는 인구 8천만의 새로운 시장으로 변모되어 통일한국은 물론 주변국에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투자 수요와 경제적 유발 효과를 통해 주변국들과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입니다. 남북한 통일로 대륙과 해양의 축이 연결되면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 환태평양경제권이 활성화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도 촉진될 것입니다.

보편적 가치 측면

한반도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서 자유로워진 통일한국은 국제사회에 자유, 인권, 법치 등의 규범을 전파하고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구호 등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한반도는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개방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와 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 한반도는 사람, 물자, 문화가 모여서 융합되고 확산되는 ‘문화전파의 관문’이 될 것이며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건설의 촉매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



미국

미국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구체화된 바 있는,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대통령의 비전에 공감

(2014.4.25, 한미정상회담)



중국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대한민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

(2014.7.4, 한중 공동성명)



러시아

러시아는 남북한간 신뢰 구축을 통하여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

(2013.11.13, 한러 공동성명)



EU

남북한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EU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

(2013.11.8,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ASEAN

한국과 ASEAN 정상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 및 신뢰를 증진함에 있어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환영

(2014.12.12,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성명)



UN

유엔은 신뢰구축, 평화, 안정을 중시해 왔는바, 북핵문제로 인한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 가능성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올해 초 남북당국간 대화제의 및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

(2015.5.19,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



“

한반도에 통일의 역사적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실질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2014.3.3, 박근혜 대통령,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

기본 방향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헌법 제4조)을 추구합니다. 역대 정부는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점진적·평화적으로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뤄나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박근혜정부도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여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점진적·평화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문화공동체를 건설하여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룩한 다음, 정치적·제도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큰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먼저 합의할 수 있는 쉽고 작은 것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하고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관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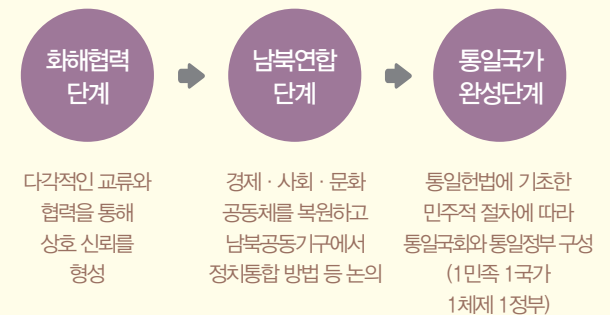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통일방안

● 헌법 규정

-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성립 배경: 1989년 250여차례의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여·야 합의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마련
이후 이를 더욱 보완하여 1994년 8.15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
- 통일의 원칙: 자주, 평화, 민주
-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와 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 민주국가
- 통일의 과정: 하나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단계적 추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째, 튼튼한 안보에 기반하여 추진됩니다.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남북이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관행을 쌓아갈 것입니다.

셋째,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규범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간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과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하여 추진합니다. 투명한 정책추진을 통해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북한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과 같은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관계가 의도한 만큼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순수 사회문화 교류, 민생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내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등 통일준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원칙·기조

목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
원칙	균형있는 접근, 진화하는 대북정책,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조	①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 추진 ②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형성 ③ 북한의 ‘올바른’ 선택 여건 조성 ④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정부의 외교구상인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긴밀한 연계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개념

- 박근혜정부의 ‘신뢰외교(Trustpolitik)’ 일환으로, 동북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안보 협력은 이에 못 미치는 부조화 현상을 극복하고, 역내 대화와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미래지향적 노력
- 작지만 의미있는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process)으로서, 역내 국가들의 점진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자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모

● 목표 및 주요 의제

- 동북아 지역 내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 외 국가·기구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
- 동북아 지역의 공동의 관심사항인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관리, 사이버스페이스, 마약 및 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
 - * 원자력 안전 협력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원자력 안전 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
- 연성안보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면서 참여국가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점진적으로 경성안보 분야 의제로 논의를 확대

● 성과 및 추진 방향

- 2014년 10월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최초의 정부간 협의회를 개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공식 참여국으로, UN·EU·NATO가 대화 파트너로 참여
- 향후 다양한 분야별·기능별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북한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지역에서 비교적 덜 민감하고 참여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시킴으로써 다자간 협력프로세스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대륙의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을 통해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하자는 구상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전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전체 차원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개념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역내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유라시아 지역과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새로운 협력 전략
-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 유라시아 컨퍼런스에서 처음 발표한 이후 2014년 10월 제10회 ASEM 정상회의, 12월 세계 정책회의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

● 목표 및 추진방안

- ‘하나의 대륙’을 위한 ‘연계성 증진 사업’ 추진: 교통 물류 연계성 강화와 유라시아 역내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 추진
- ‘창조의 대륙’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정책’ 추진: 주요 파트너와의 호혜적 교류·협력, 인적·지적·문화적 자원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혁신과 생산성을 향상
- ‘평화의 대륙’을 위한 ‘신뢰와 평화의 통로 구축’ 추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바탕으로 남·북·러, 남·북·중 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의 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과 3대 통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의 목표와 원칙, 기조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통일정책의 기본틀이라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3대 통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작은 통일’에 이르는 방법론을 담은 구체적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방문 계기에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



구상(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드레스덴 구상에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가지 대북 제안과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북한의 비핵화 촉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대북 제안’

- ①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 북한의 산모와 유아를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1,000days) 사업’ 등 인도적 지원 확대
- ②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 북한 농업·축산·산림 개발을 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건설 투자 및 지하자원 개발
 -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 및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 추진
- ③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 역사·문화예술·스포츠 분야 교류 등을 장려하여 순수 민간접촉 확대
 - 경제운용 및 경제특구 개발관련 경험, 금융, 조세관리, 통계 등 교육훈련 지원
 -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 ⇒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 남북한과 UN이 함께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 북한의 비핵화 촉구

- 북한의 핵포기 결단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 추진

3대 통로

드레스덴 구상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과 북이 서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작은 통로를 통해 남과 북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그 실천방안으로 남북간에 '환경·민생·문화의 3대 통로'를 열어가자고 북한에 제안하였습니다.

3대 통로	
환경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 ·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
민생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민생인프라 협력 시작 · 장기적으로 경제개발 노하우 공유 ·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문화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남북 공동 발굴·보존 ·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 문화사업 준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이산가족 문제 해결, 자연재해·안전문제 공동 대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등 생명과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북한이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남북한이 함께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 공동

발전을 위한 작은 통로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된다면, 남북간에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사업

첫째, 정부는 남북간 환경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의 산림복구에 필요한 묘목·종자·방제약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와 함께 북한의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한다는 입장아래 북한 영유아·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영유아 사업, 세계식량계획(WFP) 영양공급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북사업을 하는 국내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농업·축산·산림을 유기적으로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대북지원



셋째, 남북간 이질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문화·종교·스포츠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던 '겨레말 큰사전' 편찬회의, 개성의 고려왕궁터(만월대)를 공동 발굴하는 사업 등이 2014년에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9.19-10.4) 북한 선수단 참가, 2015년 제2회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8.21-24, 평양) 우리선수단 참가 등 남북간의 스포츠 교류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
북한 선수단 입장



넷째,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 및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2월 설을 맞이하여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후에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8.15 경축사를 통해서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첫걸음인 생사확인의 실현을 위해 북한에 전체 이산가족 명단의 교환을 제의하였습니다.

다섯째, 남북한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비무장

2014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처음으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래, 2013년 8.15 광복절 경축사 및 2014년 3월 드레스덴 연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북한에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DMZ



마지막으로 정부는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를 종단하는 경원선(서울-원산) 철도의 복원 사업을 2015년 8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 단독으로 시행이 가능한 남측구간부터 우선 시작하고, 이와 병행하여 DMZ 및 북측구간 사업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통일준비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박근혜정부의 4개 국정기조 중 하나는 ‘평화통일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 2014년 7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4년 8월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일준비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통일준비위원회 개최



국민들의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민간, 정부)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
조직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전문성을 갖춘 분과위원회를 설치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 국회협약체, 시민자문단, 언론자문단, 교육자문단 등을 운영
운영	전체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 분과위원회는 월 1회 개최, 자문단과도 정례 협의

통일의식의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민들의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관심도는 약 80-84%, 통일열망도는 75-80% 수준으로, 한국인들의 통일의식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중장년층에 비해 비교적 낮습니다.

정부는 젊은 세대가 통일을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통일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통일논의에 대해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탈북민 정착지원

한편,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고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까지 총 2만 8,22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통일이후 통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주택 알선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취업·교육·의료 등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하에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등 각종 외교활동을 통해 우리 통일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국제사회 전반에 한반도 통일의 미래상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동참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통일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해서는 남·북·러가 함께하는 ‘나진-하산 물류시범사업’ 및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을 통해 남북협력에 국제사회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진하고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개성공단 생산활동



나진-하산 물류협력 시범사업('15.4월)





Initiative for Korean Unification

박근혜정부의 통일 구상

발 행 인 통일부

발 행 일 2015.9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6,7층

Tel : 1577-7474

디 자 인 대통기획 www.lucksway.com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우리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